



## EU, 저작권법 개정지침 마련

유럽연합(EU) 15개국 장관들은 인터넷 음악파일 교환 및 다른 형태의 디지털복제를 포함하도록 유럽의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지침을 채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브뤼셀에 모인 EU 15개국 장관들은 지난 2월 유럽의회가 승인한 이번 지침을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18개월내 이번 지침에 따라 각국 저작권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 저작권법 지침은 '사적인 복사(private copy)'의 개념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복제콘텐츠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U가 이번 지침에 따라 저작권법을 개정할 경우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의 온라인 교환은 위법행위가 된다.

하지만 유럽 소비자들은 개인적인 이용에 한해 한

정적인 복제를 허용받게 된다.

이번 지침은 또한 반복제 기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EU내부시장위원회 프리츠 볼케스테인 위원은 "이번 지침은 유럽의 저작권 법안들을 디지털시대로 진입시켰다"고 평가했다.

EU는 저작권법 지침의 채택에 따라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협약들을 비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WIPT는 조만간 전세계적인 발효를 위해 필요한 비준국가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WIPO는 지난 1996년 12월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터넷협약'과 '공연·음반협약'을 채택했다.

미국은 지난 1998년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을 제정, WIPT를 비준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인텔 등 IT 기업들, 부시의 특허수수료 전용 계획에 반발

인텔·홀렛팩커드 등 미국의 일부 기술기업들은 특허수수료의 15%를 특허청이 아닌 다른 정부기관의 기금으로 사용하려는 부시행정부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기업이 내는 특허수수료를 정부의 다른 계획에 지출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특허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특허수수료를 모두 특허업무에만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특허수수료 수입은 총 13억5000만 달러다.

부시행정부는 이 가운데 2억700만달러를 예산이 부족한 다른 정부 부처에 지출할 계획이다.

부시대통령이 발표한 2002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 계획은 연방예산증가율을 4%로 제한하겠다는 행정

부의 방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최근 특허신청 폭증으로 특허업무가 지체됨에 따라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특허수수료를 특허청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현재 로비스트들을 동원, 상·하원의 민주당지도자들을 상대로 특허수수료 전용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